

#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 변화를 주요 동인으로\*

박 홍 서  
(한국외국어대학교)

## 〈 차례 〉

- |                       |                       |
|-----------------------|-----------------------|
| I. 서론                 | Ⅲ. 북핵위기시 중국의 동맹딜레마 관리 |
| Ⅱ. 강대국의 대약소국 동맹딜레마 관리 | 1. 제 1차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응  |
| 1. 강대국의 동맹딜레마 관리      | 2. 제 2차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응  |
| 2. 역대 한반도 위기시 중국의 대응  | Ⅳ. 결론                 |

· 주제어: 북핵, 동맹안보딜레마, 북중관계, 중국외교, 한반도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lliance-security dilemma, Sino-North Korea relations, Chinese foreign policy, The Korean peninsula

## 【한글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동맹안보 딜레마(동맹간 연루-포기) 개념을 통해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응양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강대국-약소국이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소국이 제 3국과 분쟁상황에 직면한다면, 강대국은 제 3국으로부터 자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되는 수준에 따라 자국의 동맹안보 딜레마를 관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다면,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응 역시 북핵으로 인한 연루가능성과 북한의 동맹관계 이탈(포기) 가능성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반도 비핵화”와 아울러 “대북제재반대”라는 두가지 중국의 입장은 이러한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역대 한반도 위기시(1894년 청일전쟁시기,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시기)에도 중국이 대한반도 동맹딜레마를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하려 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이 구조수준의 차원에서 용이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I. 서론

최근 북핵문제는 탈냉전기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제1차 북핵위기는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촉발되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미 양국간 기본합의문 채택으로 해소되었다. 반면, 2002년 10월 17일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으로 시작된 제 2차 북핵위기는 1차 위기와는 달리 남, 북, 미, 중, 러, 그리고 일본이 참가하는 소위 6자회담을 통해 그 문제해결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05년 9월 19일 북핵폐기와 북미 관계정상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도출해냄으로써 완전한 문제해결을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련국가간 관계는 동맹게임(alliance game)과 대적게임(adversary game)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는 동맹게임을, 한미일 3국과는 대적게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대로 한미일 3국은 상호간 동맹게임을, 북중러에 대해서는 대적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각각 북한의 “혈맹” 및 “주적”이란 측면에서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과의 동맹게임 및 대적게임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국가가 되고 있다.

그동안 동맹이론의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련국가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 연구의 초점이 주로 한미동맹에 맞추어져 왔으며,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중 동맹간 전개양상에 관한 논의들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동맹이론을 통해 북-중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들은 다양하게 시도되지 못했던 것이다.<sup>1)</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스나이더(Glenn H. Snyder)가 제시한 “동맹-안보 딜레마”(alliance-security dilemma: 이하 동맹딜레마) 모형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한다. 특히, 본 논문은 강대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약소국이 또다른 강대국인 제 3국과 분쟁상황에 직면한 경우 강대국의 동맹딜레마 관리양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대북동맹딜레마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중국의 대미관계를 대북동맹딜레마 관리양태의 주요한 동인으로 제시할 것이다.

우선 2장에서는 동맹이론의 핵심사항을 기술하고 강대국-약소국의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강대국의 전략을 세밀화 할 것이다. 또한, 이에 근거해 역대 한반도 위기시 나타났던 중국의

1) 동맹이론을 통해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관계 분석은 이수형, “동맹의 안보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 pp.21-38 참조. 북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한 논문은 문홍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인식과 정책구조,” 『중소연구』 제27집 3호, 2003, pp.99-118; 한석희, “‘6자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2005, pp. 175-200; 신상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국가전략』 제11권 2호, 2005, pp.29-54; David Shambaug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The Washington Quarterly*, 26-2, 2003, pp.43-56; 朱鋒, “中國朝核政策和策略的變化” 『中國戰略』 第3期 2004年 7月 (<http://www.irchina.org/xueren/china/view.asp?id=796>(검색일: 2005. 12. 21))

안보행태를 사전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의 이론적, 역사적 논거를 기반으로 1, 2차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동맹딜레마 최적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 II. 강대국의 대약소국 동맹딜레마 관리

### 1. 강대국의 동맹딜레마 관리

스나이더에 따르면, 동맹관계인 국가들은 상호간 연루(entrapment)와 포기(abandonment)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즉, 각 동맹국가들이 1) 상대 동맹국가로 인해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 반대로 2) 동맹국가에 의해서 포기(배반)당할 가능성은 상호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맹국 B와 제 3국의 분쟁상황 속에서 동맹국 A가 자국의 연루 가능성을 감소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곧 그 동맹국 B로부터 동맹을 파기(포기)당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맹국 B에 대한 확고한 지지표명은 동맹국으로부터의 배반가능성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자신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맹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포기-연루 딜레마를 “최적화(optimize)”하려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즉, 동맹딜레마는 연루-포기 간 적절한 거래(trade-off)가 필요한 관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sup>2)</sup>

한편, 동맹딜레마 모형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북 동맹관계처럼 동맹국간 세력이 불균등하면서도 약소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강대국이 약소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실, 약소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면, 강대국은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동맹게임에서 소위 “약자의 힘(power of weak)”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지도부는 한반도문제를 역내 지역안정을 위한 “핵심문제(core problem)”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에 대해 일정한 협상력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3)</sup>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대국이 약소국이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가라면, 약자의 힘은 상쇄되며 따라서 약소국은 결국 강대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와 같다면, 강대국은 약소국에 갖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strategic interests)”이 침해될 가능성의 수준에 따라 동맹딜레마를 관리할 것이라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략적 이익의 침해 당사자인 제 3국과의 관계는 동맹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동맹딜레마 관리 양태를

2)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36, No.4(July 1984), pp.466-468; Glenn H. Snyder, “Alliance Theory: a Neorealist First Cu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44, No.1(Spring 1990), p.113.

3) Samuel S. Kim and Tai Hwan Lee, “Chines-North Korean Relations: Managing Asymmetrical Interdependence,” in Samuel S. Kim and Tai Hwan Lee, eds., *North Korean and Northeast Asia*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pp.111-112 참조. 약자의 힘에 대한 일반 동맹이론의 설명은 Snyder(1984), pp.472-473 참조.

설명하는 주요한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전략적 이익의 침해수준이 증가하는 경우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1) 경쟁국가인 제 3국이 전략적 지역에 위치한 동맹 약소국에 대한 침공가능성을 제고시킬 경우, 그리고 2) 동맹 약소국이 제 3국에 편승할 가능성이 증가할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대국은 전자의 경우 약소국에 대한 동맹국으로서의 의무 준수 의지를 보다 강하게 표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약소국에 대한 제 3국의 군사침공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강대국의 군사개입 의지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 강대국은 적극적 개입정책을 통해 약소국으로부터의 포기(배반)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란 추론 역시 가능하다.

반면, 동맹 약소국과 분쟁중인 제 3국과 강대국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면, 강대국은 약소국으로 인한 제 3국과의 원치 않는 충돌가능성(연루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대국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압력이나 설득을 통해 동맹 약소국의 도발적 행태를 제어하고, 극단적으로 제 3국과 연합하여 약소국에 대한 공동통치(condominium)를 기도함으로써, 자국의 연루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다.<sup>4)</sup> 상술한 바와 같이 약소국으로서 제 3국에 편승하거나 강대국을 대체할 여타 동맹국을 찾기 어렵다면 이러한 강대국의 연루감소 전략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다면, 강대국-약소국간 동맹게임은 결국 보호자게임(Protector game)의 형태가 될 것이다. 즉, 게임의 결과(균형점)는 강대국이 “비협력”(제한적 지원, 정치적 압력 및 설득: 이하 D) 전략을 선택하고 약소국은 그에 대해 “협력”(순응: 이하 C) 전략을 선택하는 D-C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5)</sup> 스나이더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강대국은 일반적으로 동맹 약소국에 의한 동맹파기보다 약소국으로 인한 분쟁 연루가능성을 보다 우려하기 때문이다.<sup>6)</sup>

## 2. 역대 한반도 위기시 중국의 대응

역대 한반도 위기시 중국의 대응양태에 관한 검토는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 동맹딜레마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894년 청일전쟁 및 1950년 한국전쟁시기는 조선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제 3국(각각 일본과 미국)에 의해 침해된 시기라는 측면에서 현시기 중국의 대북 동맹딜레마의 관리행태를 분석하는데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청일전쟁시기 조중관계가 주권국가간 평등관계가 아닌 조공관계였다는 점과 한국전쟁시기 북중 양국은 아직 공식적인 동맹국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동맹이론 적용에 한계점이 될 수 있다.<sup>7)</sup> 그러나, 각각의 사례에서 중국지도

4) Snyder(1984), pp.484-486.

5) 보호자게임에 대해서는 Glenn H. Snyder and Paul Diesing, *Conflict among Nations: Bargaining, Decision Making, and System Structure in International Cri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p.47-48.

6) Snyder(1990), pp.122-123.

7) 소위 “중국적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로 표현되는 조공관계는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간

부가 현 지도부와 유사하게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는 사실은 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역시 현실주의적 사고에 기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8)</sup> 이런 맥락에서 청일전쟁 및 한국전쟁기 중국은 한국(조선, 북한)으로 인한 원치 않는 분쟁연루와 대한반도 영향력 상실을 동시에 차단하려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한반도로의 분쟁연루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한 양 시기 중국지도부의 행태는 다음과 같다. 1882년 7월 23일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중국은 즉각적인 군사개입을 감행해 조선정부로 하여금 일본과 제물포조약(8.30)을 체결토록 하는 등 신속한 사태해결을 모색하였다. 특히, 중국은 대일 강경파인 대원군을 중국으로 압송하였는데, 향후 그로 인한 일본과의 원치 않는 분쟁을 차단하려는 명확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sup>9)</sup> 1884년 12월 4일 발생한 갑신정변 직후에도 중국은 일본과 천진조약(1885.4.18)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조선에서 양국간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sup>10)</sup>

한편, 한국전쟁 직전에도 중국은 북한의 남진으로 인해 초래될 자국의 연루가능성 증가를 경계하는 행태를 드러내었다. 예를 들어, 1950년 5월 13일 김일성과의 북경회담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은 미국의 개입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신중한 군사행동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특히, 1949년 10월 국가수립 이후 경제재건 및 국민당 세력 척결이라는 시급한 국가목표는 대북 연루가능성을 제어하는 대내적 동인이 되기도 하였다.<sup>11)</sup> 사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한국전 발발 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예를 들어 한국전 개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가능성을 무시했던 북한지도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던 것이다.<sup>12)</sup> 또한, 10월 중순 미군의 북진에 따른 대규모 파병을 감행하는 순간에도 중국은 파병군의 명칭을 “인민지원군”으로 규정하고, 그 임무를 38선 이북으로 국한함으로써 미국과의 전면전(완전한 연루)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sup>13)</sup> 뿐만 아니라, 1951년 1월

위계(hierarchy)를 전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John K. Fairbank, “A Preliminary Framework,”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1-14 참조. 1961년 7월 11일 체결된 조중간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는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1999), pp. 221-222 참조.

8)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로 인식한 중국지도부의 발언은 1875년 리홍장(李鴻章)의 발언, 1950년 저우언라이(周恩來)의 발언, 그리고 1994년 장쩌민(江澤民)의 발언 참조. 각각 순서대로 『李文忠公全書: 譯署函稿』, 卷4 “論日本派使入朝鮮”;

<http://www.people.com.cn/GB/shizheng/252/7619/7646/2540425.html> (검색일:2005.12.15)

[http://www.takungpao.com/history/history\\_news.asp?news\\_id=160635](http://www.takungpao.com/history/history_news.asp?news_id=160635) (검색일: 2006.2.15) 참조.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해 역대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의 원인 및 과정을 분석한 논문은 박홍서,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 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1호(2006), pp.181-200 참조.

9) 대원군으로 인한 일본과의 분쟁가능성에 대한 리홍장의 우려는 William Francis Mannix, ed. *Memories of Li Hung Cha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13), pp.253-54 참조. 임오군란의 전개에 대해서는 김경창, 『동양외교사』 (서울: 집문당, 1982), pp.278-288 참조.

10) 천진조약은 3개항으로 1) 청일양국군대의 공동철수, 2) 군사교관의 파견 불가, 그리고 3) 향후 조선출병시 상호통보의무이다. 성황용, 『근대동양외교사』 (서울: 명지사, 1992), pp.196-199.

1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서울: 나남, 1996), pp.222-232; 朱建榮, 서각수 옮김, 『마오쩌둥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서울: 역사넷, 2005), pp.62-70.

12) 박명림(1996), pp.156-157; 朱建榮(2005), p.222/ 264.

4일 서울을 재탈환 한 직후에도 전 전선에 걸쳐 방어적 전술로의 변화를 도모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행태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북한지도부는 중국의 소극적 전술에 강력히 반발하기도 하였으나, 미국과 분쟁중인 상황에서 결국 중국의 의도(D)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북중 대표는 미-UN대표와의 휴전회담을 7월 1일 최초로 개최(C)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sup>14)</sup>

반면, 중국은 연루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특히, 청일전쟁 직전 중국의 대조선 행태는 이러한 해석을 명확히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은 임오군란 이후 소위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을 기반으로 조선정부와 기타 서구열강의 관계수립을 적극적으로 권도함으로써 일본의 대조선 세력확장을 견제하였다.<sup>15)</sup> 또한, 조선개화파의 친일 쿠데타인 갑신정변 이후 조선의 대일편승을 차단하고 대조선 종주권을 고수하기 위해 강경파인 위안스카이(袁世凱)를 파견 강력한 개입정책을 기도하기도 하였다.<sup>16)</sup>

그러나, 1894년 4월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운동으로 인해 중국의 양면적 대조선 정책(대조선 종주권 견지 및 대일분쟁 가능성 최소화)은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청일 양국이 천진조약에 의거 조선에 6월 초 각각 진병함으로써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증폭되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이 청의 공동철병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조공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조선내정개혁안”까지 제의하자 중국은 일본과의 분쟁(연루)아니면 대조선 종주권 붕괴(포기)라는 양자택일에 직면하게 되었다.<sup>17)</sup>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리홍장은 서구열강의 중재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기도 했으나 일본의 선제공격(1894.7.25 풍도해전)으로 결국 그러한 시도는 실패하였던 것이다.

이와 달리, 한국전쟁시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는 청일전쟁시기만큼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신생국가의 체제 확립이라는 내부적 국가목표와 또한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대북영향력이 이미 상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는 그다지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1950년 10월 19일 중국의 대규모 군사개입은 미군의 급속한 북진이 초래한 직접적 위협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전 개입을 통해 중북간 “혈맹관계”가 형성됨

13) Telegram, Mao Zedong to Stalin, 2 October 1950; Shuguang Zhang and Jian Chen, eds.,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and the Cold War in Asia: New Documentary Evidence, 1944-1950* (Chicago: Imprint Publications, 1996), pp.162-163.

14)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후아이(彭德怀)의 소극적 전술을 둘러싼 중북간 갈등은 Jian Che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p.212-213.

15) 중국의 권도에 따라 조선은 1882년 5월 22일 미국과의 수교를 시초로 영국, 독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와 연이은 수교를 하게 되었다. 권혁수, 『19세기말 한중관계사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2000), 40-45; 성황용(1992), p.151; 『고종실록』 16년 7월 9일 辛巳條.

16) 위안스카이가 조선정부에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기타 국가에 편승하지 말 것을 권고한 장문은 『고종실록』 23년 7월 29일 庚申條 참조. 위안스카이를 통한 청정부의 적극적 개입정책 전반은 권혁수(2000), pp.197-269 참조.

17) 사건전개 과정은 김경창(1982), pp.374-382 참조.

18) 박홍서(2006), pp.192-193. 미군의 38선 월경이후 중국의 구체적 파병결정과정은 Chen(1994), pp.169-209 참조.

으로써 이후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 Ⅲ. 북핵위기시 중국의 동맹딜레마 관리

1, 2차 북핵위기는 각각 북한의 NPT 탈퇴선언(1993.3.12/ 2003.1.10)으로 현실화되었다. 북핵을 둘러싼 북미간 갈등상황은 역대 한반도 위기상황과 유사하게 중국의 한반도 동맹딜레마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게는 북핵문제로 인한 연루가능성과 북한의 중북동맹 이탈가능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1, 2차 핵위기시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의 공세적 핵외교를 제어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대북제재 반대) 역시 명확히 공표하였다.<sup>19)</sup> 대북제재 찬성은 곧 중북동맹의 붕괴를 의미하였으며, 그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략적 이익의 침해수준이 그만큼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북한정권의 붕괴는 중국의 정책대안중 “최후선(bottom line)”이 되는 것이다.<sup>20)</sup> 이와 같다면, 중국에게 북핵문제는 명확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반대”라는 양극점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sup>21)</sup>

한편, 탈냉전기 중미관계의 변화양상은 1, 2차 북핵위기시 중국의 구체적 대응양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상술한 이론적 논의에서 나타나듯,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제 3국(미국)이 동맹약소국(북한)에 대한 강대국(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수준이 강대국의 동맹딜레마 관리양태의 핵심적 변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래에서는 중미관계의 변화양상을 통해 1, 2차 북핵 위기시 변화된 중국의 동맹딜레마 관리양상을 분석한다.<sup>22)</sup>

19)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평화적 해결 원칙은 북한의 1차 NPT 탈퇴선언(1993.3.12) 직후 첸치첸(錢其琛) 외교부장의 발언 및 2차 탈퇴선언(2003.1.10) 직후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발언에 명확히 나타난다. 각각 Nicholas D. Kristof, “China Opposes U.N. over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Mar 24, 1993(pg.6), 『人民日報』 2003/01/11/1면 참조.

20) Shambaugh(2003), p.46/50-51. 물론, 중국은 북한의 중북관계 이탈가능성 역시 우려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1999년 이후 북한의 적극적인 대미, 대일, 그리고 대남외교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후 주한미군의 주둔이 가능하다는 김정일의 발언을 예의주시하였던 것이다. You Ji,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01), 10(28), pp.393-394.

21) 요우지 역시 중국에게 북한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기 보다는 “능숙한 관리(skillful management)”가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You Ji(2001), p.398.

22) 이러한 현실주의적 접근과 달리 구성주의 관점에서 1, 2차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응변화를 분석한 논문은 김예경, “중국의 대외정책성 인식 변화: 제 1, 2차 북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역할변화 분석을 사례로,” 『국가전략』 제10권 4호, 2004, pp.33-60 참조.



## 1. 제1차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응

1990년대 초반 중미관계는 1989년 6.4 천안문 사건으로 초래된 긴장국면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천안문 사건 이후 미국은 무기판매 금수조치, 고위급 군사교류의 연기 및 미국체류 중국인에 대한 체류연장 허용 등 대중관계 전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 부시행정부는 1992년 9월 2일 F16 전투기 150대의 대만 판매를 승인하였으며, 1993년 1월 집권한 클린턴행정부는 대중 최혜국 대우(MFN) 승인문제를 중국의 인권 상황과 연계시킴으로써 중미간 긴장 관계는 안보 및 경제부분으로까지 전이되었다.<sup>23)</sup> 이러한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8월 중국의 대파키스탄 미사일 판매에 대해 대중 무역제재를 결정하고 중국은 이를 패권주의의 발로라고 강력히 비난함으로써 중미 양국간 긴장관계는 더욱 심화되기 시작하였다.<sup>24)</sup> 급기야 중국의 10월 5일 핵실험은 7월 3일 핵실험 유예를 선언한 클린턴 행정부에 정면도전하는 양상을 띠었으며, 그 결과 중미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되기도 하였다.<sup>25)</sup>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로 촉발된 1차 북핵위기는 이와 같은 중미관계의 악화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문제해결에 있어 소극적이고 보다 북한편향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3월 23일 첸치천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의를 표명하였던 것이다.<sup>26)</sup> 또한, 중국은 4월 1일 IAEA 특별이사회에서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결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함으로써 북핵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하였다. 안보리 회부여부 표결시 총 35개국 중 중국과 리비아는 반대하였고, 인도, 파키스탄, 시리아 및 베트남은 기권하였다.<sup>27)</sup> 5월 11일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825호)의 표결시에도 중국은 북미간 고위접촉의 재개 및 결의안 내용이 중립적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표결에서는 기권함으로써 실제적인 대북제재에 반대하였다.<sup>28)</sup> 이후에도 중국은 10월 1일 IAEA 제 37차 총회에서 핵안전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에 기권하였으며, 1994년 3월 21일 IAEA 특별이사회의 안보리 회부 결의도 기권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협상(북-미, 남-북, IAEA)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기대하는 관련당사국의 기대를 회피하기도 하였다.<sup>29)</sup>

23) 중미간 갈등은 Harry Harding,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pp.216-235 참조. 5월 22일 CNN과의 회견에서 장쩌민 주석은 최혜국대우 문제의 정치 쟁점화를 우려하면서 그러한 조치는 결국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Mike Chinoy, "President of China discusses US-Asia Trade Relations," *CNN*, May 22 1993 (Transcript #370-3).

24) Patrick E. Tyler, "China Protests U.S. Trade Sanction," *The New York Times*, Aug 28, 1993 (pg.3)

25) Steven A. Holmes, "World Moratorium on Nuclear Tests is Broken by China," *The New York Times*, Oct 6, 1993 (pg.A1, A6)

26) Kristof(1993).

27) David E. Sanger, "Atomic Energy Agency Asks U.N. to Move against North Korean," *The New York Times*, Apr 2, 1993(pg.A2).

28) 『조선일보』 1993/05/13/3면.

29) 『조선일보』 1994/03/22/1면.

반면, 이러한 핵위기 상황에서도 중국은 핵심 지도부의 북한방문을 통해 안정된 중북관계를 과시하였다. 예를 들어,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대표단은 1993년 7월 27일부터 3일간 북한의 “조국해방전쟁승리 40주년” 행사에 참석 김일성-김정일 승계체제에 대한 지지를 공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방북직전 후진타오는 단동의 항미원조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한국전쟁을 “위대한 반침략 정의전쟁”으로 찬양하는 등 미국과의 갈등상황에 직면한 북한 정권에 대해 중국정부의 우호를 재확인하였던 것이다.<sup>30)</sup>

물론,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북핵문제에 있어 완전히 북한 옹호적인 자세를 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즉, 중국은 대북제재에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북한 핵외교의 운용범위를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제어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장쩌민은 11월 19일 시애틀 APEC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동일 호소카와 일본총리와 회견에서도 북핵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최초로 표명하기도 하였던 것이다.<sup>31)</sup>

한편, 북핵문제를 통제권 하에 두려는 중국의 의도는 1994년 3월 19일 북한의 소위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반대로 중미관계는 개선되는 상황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5월 말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사찰을 둘러싸고 북한과 IAEA 추가 사찰단간의 마찰이 발생하자, IAEA는 6월 10일 대북제재를 결의하고 북한은 그에 맞서 6월 13일 IAEA탈퇴를 선언하였다. 이런 상황속에서 미국이 6월 15일 안보리에 제시할 구체적인 대북제재 초안을 제시하자 한반도 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미관계는 오히려 개선되는 전기를 맞고 있었다. 5월 26일 클린턴 행정부가 최혜국대우 부여문제를 중국의 인권상황과 더 이상 연계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경색되었던 양국관계는 급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sup>32)</sup>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장쩌민은 6월 7일 북핵사태 이후 북경을 방문한 최고 위급 북한인사인 최광 북한인민군 총참모장과의 회견에서 중북간 우호관계의 천명과 아울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설득하였다.<sup>33)</sup> 동시에 중국은 대북 정치적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6월 10일 한중외무장관 회담에서 첸치천 외교부장은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국과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같은 날 IAEA의 대북제재 결정시에도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다.<sup>34)</sup> 결국, 6월 15-18일 카터 전 미대통령의 방북과 김일성 주석의 남북정상 회담 수락으로 북핵위기는 극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는데, 중국의 적극적 북핵 문제 해결 의지와 그 시기상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35)</sup>

30) 『경향신문』 1993/07/29/4면.

31) 『한국일보』 1993/11/21/2면; 1993/11/22/2면.

32) Patrick E. Tyler, “China Welcomes U.S. Trade Policy,” *The New York Times*, May 28, 1994 (pg.A1).

33) Patrick E. Tyler, “China Tells Why It Opposes Korea Sanctions,” *The New York Times*, Jun 13, 1994(pg.A5).

34) 『한국일보』 1994/06/10/1면; “North Korea Courts Confrontation,” *The New York Times*, Jun 14, 1994(pg.A20).

이후 북미 양국은 일련의 협상을 거쳐 동년 10월 21일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1차 북핵위기는 해소되기에 이르렀다.<sup>36)</sup> 이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적 해결이 북한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sup>37)</sup> 즉, 강대국-약소국간 동맹게임이 예측하는대로 1차 북핵위기를 둘러싼 북중간 동맹게임의 결과는 중국의 입장이 투영되고(D) 북한이 순응하는(C) 형태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최초 북한 옹호적인 소극적 자세를 보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반면 북한의 비타협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자 보다 적극적인 대북 설득 및 압력을 통해 동맹딜레마의 최적화를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제 2차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응

2차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응은 1차 북핵위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이었다. 장쩌민 국가주석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당일인 2003년 1월 10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표명하는 동시에 북한의 NPT 탈퇴에 찬성하지 않으며, 한반도는 비핵화 되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sup>38)</sup> 이러한 상황은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 직후 첸치첸 외교부장의 대북제재 반대 발언과 대비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급기야 중국은 2월 12일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관한 IAEA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하였는데, 1993년 4월 1일 IAEA 특별이사회에서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반대표를 행사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역시 상반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sup>39)</sup>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는 관련당사국간 회담을 적극적으로 주선하려는 시도에서도 명확히 나타났으며, 그 결과 4월 23일 북경에서 북-미-중간 3자회담이 최초로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본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을 약속하고 반면 미국에게는 북한이 향후 비협력적 행동을 지속할 경우 보다 적극적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문제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었다.<sup>40)</sup> 또한, 7월 12-15일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다자회담 개최에 대한 중국의 희망을 전달하였다. 특히, 다이빙궈는 방북에 앞서 러시아를 방문하고, 방북 직후에는 미국을 방문해 북핵 관련당사국들의

35) LA Times 보도에 따르면, 김일성-카터 회담전 중국은 주중 북한대사에게 미국과의 타협이 건설적이며, 중국은 북한의 대미 강경책에 무한히 지원할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Jim Mann, "China Assisted U.S. Efforts on N.Korea, officials say," *Los Angeles Times*, June 28, 1994 (pg. A1).

36) 기본합의서는 1) 북한핵연감속 원자로의 경수로 대체, 2)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3)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4) 핵비확산에 대한 공동 노력이다. 『한겨레신문』 1994/10/22/5면.

37) 중국외교부는 22일 성명에서 북미 기본합의서 체결을 환영하고,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 및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표명하였다. 『人民日報』 1994/10/22.

38) 『人民日報』 2003/01/11/1면.

39) 『세계일보』 2003/02/13/1면.

40) Joseph Kahn, "China Offers its Help in U.S.-North Korea Nuclear Talks," *The New York Times*, Apr 24, 2003 (pg. A3).

중재자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sup>41)</sup>

중국의 이와 같은 적극적 문제해결 노력은 8월 7-9일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을 방문, 북한으로부터 8월말 다자회담 개최에 관한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그 실질적 결실을 맺게 되었다.<sup>42)</sup> 그 결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1차 6자회담이 8월 27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2, 3차 6자회담 역시 각각 2004년 2월 25-28일과 2004년 6월 23-26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것이다.<sup>43)</sup>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원조를 약속함으로써 북한의 6자 회담 참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03년 10월 30일 김정일-우방귀(吳邦國) 회담에서 중국은 5천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와 2004년 4월 19-20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시 3억원(인민폐)의 무상원조를 약속하였던 것이다.<sup>44)</sup>

한편, 대북 설득과 아울러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제어하려는 중국의 의도들은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당국은 북한이 신의주 경제특구 초대장관으로 내정한 양빈(楊斌)을 2002년 10월 부패혐의로 연금하고, 2003년 2월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대북송유관을 수일간 잠정폐쇄하기도 하였다. 또한, 9월에는 중북 국경선의 공안부대를 인민해방군으로 전환하는 등 대북압력의 “징후”들이 감지되었다.<sup>45)</sup> 심지어 중국내 일각에서는 1961년 체결된 중조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중 군사동맹 부문의 삭제를 주장하는 의견까지 개진되기도 하였다.<sup>46)</sup>

1차 북핵위기시와 달리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 북핵해결 의지는 대미관계의 개선이라는 맥락 속에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 9.11 이후 중미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인식 및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sup>47)</sup> 사실, 2001년 1월 20일 취임한 부시행정부 초기 중미관계는 긴장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부시정부는 초기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인식하였고, 특히 4월 1일 발생한 EP-3 미정찰기와 중국전투기의 충돌사건으로 인해 중미관계는 실질적으로 경색되기도 하였다.<sup>48)</sup> 그러

41) 다이빙귀의 중재외교의 일정에 관해서는 中國外交部網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1032/t23476.htm> 참조. (검색일 2005. 11. 15)

42) 『人民日報』 2003/08/09/3면.

43) 6자회담의 일정 및 구체적 안건들에 대해서는 “朝鮮半島的核問題第五輪六方會談”, 『人民網』, <http://world.people.com.cn/GB/guoji/209/9992/index.html> 참조. (검색일: 2005. 11. 15)

44) 신상진(2005), pp. 46/48.

45) 朱鋒(2004). 한편, 8월 27일 개최된 1차 6자회담 직전 각국대표단을 위한 연회에서 중국 외교부 관리 는 대북송유관 잠정폐쇄 보도는 사실무근이란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서울신문』 2003/08/27/3면.

46) 沈驥如, “維護東北亞安全的當務之急: 制止朝核問題上的危險博一,” 『世界經濟與政治』 第9期, 2003. ([http://www.iwep.org.cn/wep/World%20Volume/2003/2003,9/mulu\\_2003\\_09.htm](http://www.iwep.org.cn/wep/World%20Volume/2003/2003,9/mulu_2003_09.htm) 검색일: 2005. 12. 21)

47) 9.11 이후 중미관계의 진전은 David E. Sanger, “In Terror, At Last a Common Enemy for the Big Three,” *The New York Times*, Oct 28, 2001 (pg.WK1); Jonathan D. Pollack, “Chinese Security in the Post-11 September World: Implications for Asia and the Pacific,” *Asia-Pacific Review*, Vol.9, No.2, 2002, pp.19-20.

48) 충돌사건에 대한 중미 양국의 항의 및 불만의 표시는 각각 『人民日報』 2001/04/04/1면; Michael R. Gordon, “Rumsfeld Limiting Military Contacts with the Chinese,” *The New York Times*, Jun 4, 2001, A1. 참조.

나, 9.11테러를 기점으로 중미관계는 급반전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대테러리즘의 척결을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공조가 필수적이었으며, 자국내 이슬람 분리세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중국으로서도 미국의 대테러 공조 제의는 환영할만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대미관계 개선은 중국위협론을 불식시켜 안정적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중국의 탈냉전기 “대전략(grand strategy)”과도 부합되었다.<sup>49)</sup>

이러한 배경속에서 중미관계는 실질적인 진전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2001년 10월 19일 상하이 APEC 중미 정상회담에서 중미 양국은 “건설적 협력 관계(Constructive and Cooperation Sino-US Relations: 建設性合作關係)”를 공식화하기에 이른 것이다.<sup>50)</sup> 또한, 10월 8일 개시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해서도 중국은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은 10월 10일 이바노프(Igor Ivanov)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반테러리즘에 관한 중국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새로 구성될 아프가니스탄 연합정부에 대해 지지를 표시하였던 것이다.<sup>51)</sup> 아울러 중국은 2002년 11월 8일 미국이 기초한 이라크 무장해제에 관한 유엔결의안(1441호)에 찬성표를 행사하였으며, 이후 무력사용에 관한 새로운 유엔결의안에 관해서도 프랑스, 러시아와 달리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다.<sup>52)</sup> 한편,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개시되자, 중국은 무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명확히 반대하였으나, 유엔결의안에 대한 이라크의 준수 의무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자제하기도 하였다.<sup>53)</sup>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로 인한 자국의 연루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중국의 의도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3차에 걸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급전된 북핵상황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중국은 2월 19일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평양으로 급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핵문제가 더 이상 복잡하게 전개되지 않기를 명확히 희망하였다.<sup>54)</sup> 곧이어 3월 3일 서울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측 6자 회담 대표가 미국측 대표인 힐(Christopher Hill) 주한미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sup>55)</sup> 또한, 중국지도부는 3월 21일 방중한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국무장관과 북핵에 관한 논의를 갖고 3월 22일 역시 방중한 박봉주 북한 내각 총리에게 미국측의 메시지를 전달함과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의

49) 소위 “화평굴기(和平崛起)”로 표현되는 중국의 대전략은 Avery Goldstein,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chapter 5-6 참조.

50) 『人民日報』 2001/10/20/1면.

51) 『人民日報』 2001/10/10/4면.

52) 중국의 1441호 유엔결의안 찬성은 [http://www.chinadaily.com.cn/en/doc/2002-11/09/content\\_143140.htm](http://www.chinadaily.com.cn/en/doc/2002-11/09/content_143140.htm) (검색일: 2005.1.25) 참조. 중국의 강력한 대미관계 개선의지에 관해서는 Goldstein(2005), p.184 참조.

53) 『人民日報』 2003/03/21/1면.

54) 『人民日報』 2005/02/22/1면.

55) 『서울신문』 2005/03/04/2면.

재개를 촉구하였다.<sup>56)</sup> 아울러, 북한핵외교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 1부상이 4월 2일 북경을 극비리에 방문해 북핵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sup>57)</sup> 특히, 이러한 일련의 중-북 접촉에서 후진타오의 평양방문 여부가 중국의 대북압력카드로 작용했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논의 역시 이루어졌다는 추측이 광범위하게 퍼지기도 하였다.<sup>58)</sup>

한편,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는 북핵문제에 있어 최근 “주의할만한 새로운 상황(值得關注的新情況)”이 발생했다는 색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핵 문제의 긴박성을 암시하고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피력하였다.<sup>59)</sup> 흥미로운 점은 후진타오의 발언이후 중국내에서 6자회담 재개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실제로 북한의 대응이 보다 유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측면이다.<sup>60)</sup> 예들 들어, 5월 16일 10개월여만에 개최된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북한은 6자회담 복귀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였으며, 6월 6일 북미간 뉴욕접촉에서도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시사했던 것이다. 특히, 유엔주재 중국대사인 왕꾸양야(王光亞)는 북한의 구체적 복귀시기가 향후 수주일내라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의도에 대해 중국이 명확한 정보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였다.<sup>61)</sup> 실제로 북한은 6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형식으로 7월 중 6자회담 복귀를 시사하고 7월 9일 북경에서 김계관-힐 접촉을 통해 7월 마지막 주 6자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sup>62)</sup> 곧 이어 중국은 7월 12일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자격으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평양에 파견, 6자회담에 관한 구체적 일정의 조율과 아울러 향후 북한과의 대규모 경제합작 등에 대해 논의하였던 것이다.<sup>63)</sup>

결국 4차 6자회담은 3차회담 이후 1여년만인 7월 26일 북경에서 개최되어 한차례의 휴회 끝에 9월 19일 북한의 핵포기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도출해 내기에 이르렀다.<sup>64)</sup> 중

56) Glenn Kessler, “Rice: U.S. and Allies discussed ‘Options’ against N.Korea,” *Washington Post*, March 22, 2005, (pg.A13). 24일 후진타오-박봉주 회담에서 후가 밝힌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4가지 입장은 1) 한반도 비핵화, 2)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안의 해결, 3)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수호, 그리고 4)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다. 『人民日報』 2005/03/25/1면.

57) 『세계일보』 2005/04/05/5면.

58) 임을출, “후진타오의 방북, 6자회담을 부른다.” 『한겨레 21』, 제555호, 2005/04/12.

59) 『人民日報』 2005/05/09 1면. 한편, 한국정부는 후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진의가 기존의 중국 입장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일보』 2005/05/10/4면.

60)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중국정부 및 중국내 연구가들의 긍정적 전망은 각각 中國外交部网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195333.htm> (검색일: 2005/11/05); “朝鮮核問題新動向-重開六方會談出現一絲希望.”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world/2005-05/14/content\\_2955838.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05-05/14/content_2955838.htm) (검색일: 2005/09/30) 참조.

61) 남북차관급 회담 보도는 『경향신문』 2005/05/20/2면. 북미간 뉴욕접촉 및 유엔 중국대사의 발언은 <http://edition.cnn.com/2005/US/06/07/koreas.nuclear/?eref=yahoo> 참조. (검색일: 2005/09/30).

62) 『경향신문』 2005/06/18/3면. 『한겨레신문』 2005/07/11/1면.

63) 탕자쉬안의 평양방문은 中國外交部网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203310.htm> (검색일: 2005. 9. 30); 『人民日報』 2005/07/13/3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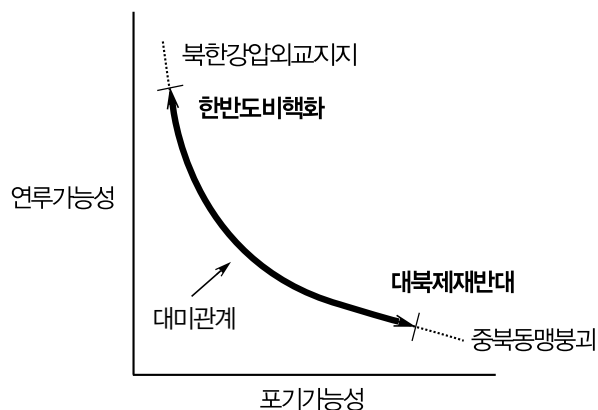
64) 공동성명의 주요골자는 북한의 핵포기, 북-미 관계정상화 추진, 대북 에너지 지원 및 관련국가간 경

국은 4차 6자회담의 타결을 중국외교의 “승리”로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중국의 반응은 자국의 의도(D)대로 북한이 대미협상을 통해 핵포기를 선언(C)하였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65)</sup>

#### IV. 결 론

이상에서 북핵위기시 중국의 동맹딜레마 양상과 그것을 최적화하려는 대응양태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치적 압력 및 설득을 이용해 북핵위기로 인한 자국의 연루가능성을 감소시켰다. 반면 미국의 “대북제재”에는 명확한 반대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중관계의 악화 역시 방지하고자 하였다. 즉, 아래 <그림 1>에서 보여지듯, 중국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반대”는 대북 동맹딜레마를 최적화하기 위한 두 개의 상반된 임계점(red line)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은 대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대북 동맹딜레마의 최적화 양상을 변화시켰다. 중국은 대미관계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거나 실제로 우호적으로 변화될수록 북한의 강압외교를 제어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양태를 나타내었다. 1차 북핵위기시와 달리 2차 북핵위기시 중국의 적극적 문제해결 시도는 이러한 대미관계 개선이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 중국의 대북 동맹딜레마 관리



제협력 등이다. <http://www.chinanews.com.cn/news/2005/2005-09-19/8/627838.shtml> (검색일: 2005. 11. 18).

65) 6자회담 타결에 대한 중국의 환영입장은 “六方會談聲明是中外外交的胜利”,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world/2005-09/20/content\\_3515622.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05-09/20/content_3515622.htm) (검색일: 2005/09/21)

이와 같다면, 중국의 향후 대응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운용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특히, 상술한 바와 같이 동맹 당사국중 강대국은 동맹 약소국으로 인한 연루가능성을 더욱 우려한다면, 중국의 향후 대북 동맹딜레마 관리는 북한의 강압외교를 적절히 제어하는 방향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물론, 중국은 그에 대한 보상급부로 미국의 대북제재 반대를 명확히 견지하고 경제지원 등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4차 6자회담이 타결된 후 후진타오가 10월 28-30일 평양을 방문해 대규모 경제협력 및 중북관계의 우호를 재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sup>66)</sup> 이런 측면에서 향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대응양상이 동일한 초기조건 아래서도 현재와는 다른 행태(북한의 핵보유 용인 및 대북제재 찬성)를 나타낸다면, 단위수준의 변인들(중국의 국내정치 요인 및 중북관계의 특수성 등)이 보다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치적 맥락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한반도 위기시 중국의 대응이 비교적 일관적이었다는 사실은 향후 대북동맹딜레마의 관리양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

66) “鞏固傳統友誼— 加強相互信任 擴大互利合作” 『人民日報』, 2005/10/31/1면.



## 참고 문헌

## 『고종실록』

- 권혁수, 『19세기말 한중관계사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2000.
- 김경창, 『동양외교사』, 서울: 집문당, 1982.
- 김애경, “중국의 대외정체성 인식 변화: 제 1,2차 북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역할변화 분석을 사례로,” 『국가전략』, 제10권 4호, 2004.
- 문홍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인식과 정책구조,” 『중소연구』, 제27집 3호(2003).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서울: 나남, 1996.
- 박홍서,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 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1호(2006).
- 성황용, 『근대동양외교사』, 서울: 명지사, 1992.
- 신상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국가전략』, 제11권 2호(2005).
- 이수형, “동맹의 안보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1999).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1999.
- 임을출, “후진타오의 방북, 6자회담을 부른다.” 한겨레 21, 제555호(2005/04/12).
- 朱建榮, 서각수 옮김, 『마오쩌퉁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서울: 역사넷, 2005.
- 한석희, “‘6자회담’ 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2005).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Chinoy, Mike., “President of China discusses US-Asia Trade Relations,” *CNN*, May 22 1993 (Transcript #370-3).

Fairbank, John K., “A Preliminary Framework,”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Goldstein, Avery.,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Gordon, Michael R., “Rumsfeld Limiting Military Contacts with the Chinese,” *The New York Times*, Jun 4, 2001 (Page A1).

Harding, Harry.,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 Holmes, Steven A., "World Moratorium on Nuclear Tests is Broken by China," *The New York Times*, Oct 6, 1993 (Page A1, A6).
- Kahn, Joseph., "China Offers its Help in U.S.-North Korea Nuclear Talks," *The New York Times*, Apr 24, 2003 (Page A3).
- Kessler, Glenn., "Rice: U.S. and Allies discussed 'Options' against N.Korea," *Washington Post*, March 22, 2005 (Page A13).
- Kim, Samuel S. and Tai Hwan Lee, "Chines-North Korean Relations: Managing Asymmetrical Interdependence," in Samuel S. Kim and Tai Hwan Lee, eds., *North Korean and Northeast Asia*,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 Kristof, Nicholas D., "China Opposes U.N. over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Mar 24, 1993 (Page 6),
- Mann, Jim., "China Assisted U.S. Efforts on N.Korea, officials say," *Los Angeles Times*, June 28, 1994 (Page A1).
- Mannix, William Francis, ed., *Memoreis of Li Hung Cha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13).
- "North Korea Courts Confrontation," *The New York Times*, Jun 14, 1994 (Page A20).
- Pollack, Jonathan D., "Chinese Security in the Post-11 September World: Implications for Asia and the Pacific," *Asia-Pacific Review*, 9-2 (2002).
- Sanger, David E., "Atomic Energy Agency Asks U.N. to Move against North Korean," *The New York Times*, Apr 2, 1993 (Page A2).
- Sanger, David E., "In Terror, At Last a Common Enemy for the Big Three," *The New York Times*, Oct 28, 2001 (Page WK1).
- Shambaugh, David,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The Washington Quarterly*, 26-2 (2003).
- Snyder, Glenn H. and Paul Diesing, *Conflict among Nations: Bargaining, Decision Making, and System Structure in International Cri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Snyder, Glenn H., "Alliance Theory: a Neorealist First Cu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4-1 (Spring 1990).
- \_\_\_\_\_,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July 1984).
- Tyler, Patrick E., "China Protest U.S. Trade Sanction," *The New York Times*, Aug 28, 1993 (Page A3).
- Tyler, Patrick E., "China Welcomes U.S. Trade Policy," *The New York Times*, May 28,

120 國際政治論叢 제46집 1호, 2006

1994 (Page A1).

Tyler, Patrick E., "China Tells Why It Opposes Korea Sanctions," *The New York Times*, Jun 13, 1994 (Page A5).

You, Ji.,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28(2001).

Zhang, Shuguang and Jian Chen, eds.,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and the Cold War in Asia: New Documentary Evidence, 1944-1950*, (Chicago: Imprint Publications, 1996).

“朝鮮半島의 핵問題第五輪六方會談”, 『人民網』,

<http://world.people.com.cn/GB/guojj/209/9992/index.html> 참조. (검색일: 2005. 11. 15)

“朝鮮核問題新動向-重開六方會談出現一絲希望”,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world/2005-05/14/content\\_2955838.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05-05/14/content_2955838.htm) (검색일: 2005/09/30)

“鞏固傳統友誼- 加強相互信任 擴大互利合作” 『人民日報』, 2005/10/31/1면.

“六方會談聲明是中是外交的勝利”, 『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world/2005-09/20/content\\_3515622.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05-09/20/content_3515622.htm) (검색일: 2005/09/21)

『李文忠公全書: 譯署函稿』, 卷4 “論日本派使入朝鮮”

沈驥如, “維護東北亞安全的當務之急: 制止朝核問題上的危險博一,” 『世界經濟与政治』 第9期,

2003. ([http://www.iwep.org.cn/wep/World%20Volume/2003/2003,9/mulu\\_2003\\_09.htm](http://www.iwep.org.cn/wep/World%20Volume/2003/2003,9/mulu_2003_09.htm)  
검색일: 2005.12.21)

朱鋒, “中國朝核政策和策略的變化” 『中國戰略』 第3期 2004年 7月

(<http://www.irchina.org/xueren/china/view.asp?id=796> (검색일: 2005. 12. 21)

中國外交部網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1032/t23476.htm> (검색일 2005.11.15)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195333.htm> (검색일: 2005.11.5)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203310.htm> (검색일: 2005.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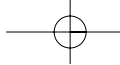
『경향신문』 1993/07/29/4면; 2005/02/23/2면; 2005/06/18/3면; 2005/05/20/2면.

『서울신문』 2003/08/27/3면; 2005/03/04/2면.

『세계일보』 2003/02/13/1면; 2005/04/05/5면.

『조선일보』 1993/05/13/3면; 1994/03/22/1면.

『한겨레신문』 1994/10/22/5면; 2005/07/11/1면.



『한국일보』 1993/11/21/2면; 1993/11/22/2면; 1994/06/10/1면; 2005/05/10/4면.

『人民日報』 1950/08/07; 1994/10/22; 2001/04/04/1면; 2001/10/20/1면; 2001/10/10/4면;  
2003/01/11/1면; 2003/03/21/1면; 2003/08/09/3면; 2005/02/22/1면;  
2005/03/25/1면; 2005/05/09/1면; 2005/07/13/3면; 2005/10/31/1면.

[http://www.chinadaily.com.cn/en/doc/2002-11/09/content\\_143140.htm](http://www.chinadaily.com.cn/en/doc/2002-11/09/content_143140.htm)

(검색일: 2005. 1. 25)

<http://edition.cnn.com/2005/US/06/07/koreas.nuclear/?eref=yahoo>

(검색일: 2005. 9. 30)

<http://www.chinanews.com.cn//news/2005/2005-09-19/8/627838.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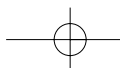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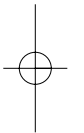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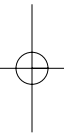
(검색일: 2005. 11. 18)

<http://www.people.com.cn/GB/shizheng/252/7619/7646/2540425.html>

(검색일: 2005. 12. 15)

[http://www.takungpao.com/history/history\\_news.asp?news\\_id=160635](http://www.takungpao.com/history/history_news.asp?news_id=160635)

(검색일: 2006. 2. 15)\*



## China's Management of Alliance Dilemma over the Nuclear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 Its Theory and Practice

Park, Hongse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China's effort to dissolve the alliance-security dilemma during the nuclear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the alliance theory, a strong power generally seeks to avoid the possible entrapment caused by the conflict between its weak ally and strong adversary. Accordingly, the strong ally usually presses its weak counterpart to restrain from taking more assertive stance towards the adversary. In this respect, China's response to Pyongyang's coercive diplomacy can be summarized by its continual effort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entrapment. This attempts, of course, may also lead North Korea to defect from the alliance, so China has repeatedly assured N.Korea that it would not support Washington's willingness to take more assertive measures, economic sanction and military action alike. The fact that any Chinese governments had shown similar responses during the crisis of the Korean peninsula, like that of 1894 and 1950, corroborates this perspective.

투 고 일 : 2006년 2월 28일  
심 사 일 : 2006년 3월 6일  
심사완료일 : 2006년 4월 21일